

## ■ 6.2지방선거 준비 마무리 수순 민주당 경선룰 들여다 보니

# 풀뿌리 공천권 시민→당원 역주행

민주당의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공천 방법이 뚜렷한 원칙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면서 혁신 공천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다.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의지인이 지역 단체장 후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동원 경선의 폐단이 큰 체육관 경선 방법이 포함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근 광주시장 후보를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전수조사 50%'로 선정하기로 하고 서류심사에 나서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광주시장 후보 선정과 관련, 대부분의 광주 국회의원들이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지역 민심의 논란도 컸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외면하고 끝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붙였다.

동원 경선의 폐해를 막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명분이었다.

**민주당 경선룰**  
●광주시장=배심원 50%(외지인 25%·시민 25%) +당원전수조사 50%  
●전남지사=도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 광주 배심원제 외부인사·당원이 좌지우지 전남 '체육관 경선' 동원...개혁 뒷전 꼼수만

하지만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의 참여를 제한시킨 것은 물론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상징인 광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실질적인 시민 참여율이 25%에 그치고 시민 배심원 숫자도 100~200명 수준으로 구성된 전망이어서 광주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외부 인사들이 전문 배심원으로 참여, 광주시장 후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의 역량을 꺾은 것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 등의 이유로 광주시장 경선에 전략공천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그러나 동원 경선을 방지한다는 민주당의 혁신 공천 방법은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자취를 감춘다. 동원 경선을 피할 수 없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체육관 경선)를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50%나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원 여론조사 경선에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경선의 열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원 선거인

단 투표가 불가피한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공색한 변명이다.

김효석 전남도당 위원장은 "수차례나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지역이 넓은 전남 지역의 특성상 동원 경선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었다"며 "결국 이번 전남지사 선거도 동원 및 돈 선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 방법이 뚜렷한 원칙보다는 지도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마저 제기되면서 혁신 공천의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기획본부와 혁신과 통합위원회, 중앙당 공심위 등에 주류 측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데다 경선 방법이 뚜렷한 원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천 방법이 정해졌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민 자존심 지키기위해 점었다”

### 박광태 시장 불출마 선언...“시정 전념할 것”

박광태 광주시장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의 뜻을 접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우선 시정에 전념하고 앞으로 자연인으로, 일반인으로 광주시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박 시장은 또 "중앙당의 경선방식 결정과정에서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자존심에 허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며 "광주시민이 시장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광주에 내려와 후보 선택권을 갖는 것은 광주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시민배

심원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광주시민은 민주시민이고, 정치감각이 가장 높아 후보를 광주시민이 뽑을 수 있도록 수차례 (중앙당에) 건의했지만, 묵살됐다"면서 "구차스럽게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묵살하고, 출세를 위해 다시 한번 시장직을 도전할 수가 없어 나를 희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강운태 의원과 연대 문제와 관련, "강 의원과 어제 만나 시민배심원제의 부당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하지만, 이제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어느 한쪽도 치우침 없이 오로지 행정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광주를 살기 좋은 1등 광주로 만들려고 모든 정열을

바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느낀다"며 "강한 결단과 추진력 때문에 때로는 밀어붙이기식이나, 독선적이나 하는 지적도 받았지만,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돈선거’ 임자·화원농협 지원금 57억 회수당했다

### 관련자 피선거권 제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탈법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지역 농협 2곳이 농협 중앙회로부터 지원금 57억원을 회수당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1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안 임자농협에 지원된 유통·조합특색사업 등 지원금 19억원을 회수했다. 최근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당선자 박모(64)씨 등 출마자 4명이 구속돼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한 때문이다. 또 조합장이 2008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해남 화원농협에 지원한 자금 38억원을 환수했다.

광주지역 본부도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근 2명이 구속된 서광주농협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들 농협을 중앙회는 물론 지역본부의 각종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중앙회는 이날 불발선거 관련자는 앞으로 출마를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특히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10~50배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불발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조합은 신규 점포 설치나 농협 상표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이 18일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시청 간부들과 광주 시청 브리핑 룸을 나와 새로운 행보를 시작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